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1994. 11.

文 興 鎬(政策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本 資料는 統一政策 立案의 參考資料로 作成한 것으로서
모든 內容은 論文作成者의 個人的인 意見이며 當 研究院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힙니다.

目 次

I. 李鵬 總理 訪韓의 意義	1
II. 主要 論議와 成果.....	2
1. 韓半島 平和·安定을 위한 協力 強化	2
2. 經濟交流·協力 擴大	4
III. 李鵬 總理의 방한과정에서 表출된 中國의 對韓半島政策 基調	8
1. 韓半島의 平和·安定 維持.....	8
2. 한국과의 經濟交流·協力 強化	12
3. 對동북아 影響力 擴大를 위한 기반 구축	13
IV. 한국의 政策的 考慮事項	14
1. 장기적인 關係發展 構圖 설정	14
2. 분야별 均衡的 關係發展 강구	15
3. 對北 대응차원의 對中政策 지양	16
4. 軍事·安保協力 추진.....	17
5. 北·美, 北·日 修交過程에서의 韓·中協力	17
6. 中國의 對內外 政策變化에 대한 對備策 강구	19
7. 統一對備 韓·中協力.....	20

I. 李鵬 總理 訪韓의 意義

○ 한·중수교 이후 노태우 대통령의 방중(1992.9.27~30), 김영삼 대통령의 방중(1994.3.26~30)에 이어 이봉 총리의 訪韓이 실현됨으로써 한·중관계의 質的 도약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음.

- 李鵬 總理의 방한은 한국 대통령의 방중에 대한 答訪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중국의 정치현실상 李鵬 總理의 정치적 지위가 總書記·國家主席을 겸하고 있는 江澤民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중국이 1995년 상반기 江澤民의 방한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¹⁾ 答訪의 形式·水準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음.

○ 李鵬 總理의 방한은 김일성 사망, 북·미간 핵협상 타결 등으로 남북관계 및 주변국가들의 對한반도정책이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한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음.

- 동북아지역의 평화·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동반자관계 확립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동북아지역의 국제질서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새로운 외교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自覺하는 계기가 되었음.

1) 중국의교부 唐家璇 副部長은 10월 27일 북경주재 한국기자들과의 회견중 “한·중 양국이 외교적 교섭을 통해 양국 모두에 적합한 시기를 택해 강택 민 국가주석의 방한을 실현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한편, 李鵬 總理의 방한은 한·중관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치·경제관계의 불균형적 발전을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한·중 경제관계의 경우 1993년말 현재 양국간 교역량이 91억 달러,²⁾ 한국의 對中投資가 13억 달러에 달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양국의 정치관계는 관계정상화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발전추세를 보여왔음.
 - 따라서 李鵬 總理의 방한은 한·중 정치·경제관계의 균형적 발전 및 기존 교류·협력의 制度化·法制化를 통해 양국관계의 양적 팽창 뿐만 아니라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II. 主要 論議와 成果

1. 韓半島 平和·安定을 위한 協力 強化

- 한·중 양국은 김영삼 대통령과 李鵬 總理의 회담(1994.10.31)을 통하여 북·미합의에 따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다는 점과 향후 과제는 북·미간 제네바회담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음.

2) 1994년 6월말 현재 양국의 교역량은 54억 5천만 달러이며, 한국은 중국의 6대교역국, 중국은 한국의 3대교역국임. 또한 1993년의 한·중 인적교류는 연 인원 15만명에 이르고 있음.

- 중국이 북한에 대해 북·미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등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함.
 - 한·중간의 이러한 입장은 두차례의 한·중 외무장관회담에서도 재확인되었음.
- 또한 양국은 김일성 사후 북한의 정치·경제적 안정이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한·중관계 발전에 유익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음.
- 이와 관련,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 김정일체제의 조속한 안정이 한반도 안정에 유익하다는 점과 북한의 새로운 지도체제가 공식화된 이후 南北頂上會談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음.
 - 또한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지도부가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남북한 共存共榮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동참할 경우 북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였음.
 - 李鵬 總理는 김일성 사후 북한정세를 전달하고 한반도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에 입각한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 남북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相互信賴 구축과 共存共榮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한편, 한반도 停戰體制의 平和體制 轉換과 관련, 沈國放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1994.10.31)을 통해 “남북한이 냉전종식에도 불구하고 정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전제하고 관련국가간의 대화·협상을 통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沈國放 대변인은 남북한의 평화체제가 정착되는 시점까지 기존의 정전협정은 유효하며, 관련국가들이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또한 평화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한국의 역할과 관련, 沈대변인은 “한국이 정전협정의 조인당사국은 아니지만 한반도의 평화·안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평화협정체결 문제를 북·미간의 협상사안으로 주장하는 북한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음.
-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李鵬 總理의 離韓 기자회견에서도 피력되었음.

2. 經濟交流·協力 擴大

가. 민간항공운수협정

- 한·중 양국은 정기항로 개설문제와 관련하여 1991년 2월 이후 8차에 걸친 실무협의를 추진하여 왔으나, 비행관제선, 離遠權, 복수항공사 취항문제 등에 대한 쌍방의 이견으로 항공운수협정을 정식 체결하지 못하였음.
- 李鵬 總理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은 한·중 민간항공운수협정(정식 명칭은 「大韓民國 정부와 中華人民共和國 정부간의 民間航空運輸에 관한 暫定協定」)을 체결하였음.

- 同協定은 前文과 20개조의 本文 및 附屬書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은 ① 양국 지정항공사의 他方國 영역 무착륙 비행권, ② 합의된 노선에서의 승객·화물·우편물 積載 및 下陸權, ③ 항공기 장비·부품·연료·윤활유 등에 대한 關稅 상호면제, ④ 상호 支社 설치 및 영업수익의 본국 送金權, ⑤ 민간항공의 안전을 위한 상호협력 등을 명시하고 있음.

○ 한·중 민간항공운수협정의 체결로 한국 민간항공의 중국진출을 위한 법적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이는 한·중간 人的, 物的 交流 擴大와 友好協力 增進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同協定에 의거하여 개최될 예정인 양국 지정항공사간의 실무회담에서 항공운수협정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補完되어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양국은 서울에서 개최된 제8차 실무회담에서 1994년 11월 1일 양국 항공사의 서울·북경 정기취항에 관한 협정에 가 서명했으나(1994.7.27), 중국측이 운항회수 축소 등의 문제를 제 거론함으로써 정기취항이 연기된 바 있는데, 이와 관련된 사항 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임.³⁾

3) 양국간 주요 대립은 중국이 양국 항공사의 정기취항 이후 한국측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이 중국측 항공기 이용승객보다 20%를 초과할 경우 추가승객 1인당 일반석 요금의 15%를 중국측 항공사에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한 데서 비롯되었음.

나. 원자력협력협정

- 李鵬 總理는 김영삼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에 한국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양국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자력협력협정(정식 명칭은 「大韓民國 정부와 中華人民共和國 정부간의 原子力의 平和的 利用에 관한 협력을 위한 協定」)을 체결하였음.⁴⁾
- 한·중 원자력협력협정은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互惠平等의 원칙에 기초하고, 자국의 國內法습과 國際的 義務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 증진”을 기본정신으로 양국간 산업협력관계 발전을 촉진한다는 취지하에 체결되었음.
 - 그 밖에 同協定의 本文에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양국간 협력분야, 협력형태, 인가된 사업체간의 특정협력 계획과 사업의 조건, 이행절차, 財政관련 합의사항 및 기타 적절한 사항을 규정하는 施行約定의 체결 필요성 등을 명시하고 있음.

4) 한편 중국은 李鵬 總理의 방한에 앞서 唐家璇 외교부 부부장의 기자회견(1994.10.27)을 통하여 對北韓 경수로 지원을 위한 국제건설사업 참여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즉 唐부부장은 “국제건설사업이 대북한 경수로 지원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을 요청할 경우 중국은 충분한 연구를 거쳐 기업을 통한 상업적 협력·교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다. 민간항공기 공동개발에 관한 약정

○ 한·중 양국은 100인승급 중형 민간항공기 공동개발과 관련된 약정 (정식명칭은 「大韓民國 정부와 中華人民共和國 정부간의 민간항공기 협력개발에 관한 約定」)을 체결하였음.

- 同約定은 양국 정부간에 이미 체결된 「산업협력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정」(1994.6.6), 「민간항공기산업 기술협력 및 개발에 관한 양해 각서」(1994.6.6)의 구체적인 이행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

○ 양국은 한국의 三星航空과 중국의 中國航空工業總公司(ABIC)를 항공기 공동개발의 主事業者로 내정하고 쌍방이 호혜평등, 공동투자, 공동위험부담, 공동시장개발 원칙하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양국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 항공사와의 기술협력, 일부 아시아국가의 持分 참여(持分の 10% 내외)를 허용하기로 합의하였음.

- 또한 한국과 중국 및 동남아의 항공기시장에 공동진출한다는 데 합의하였음.

라. 자동차·전자교환기·HD-TV 등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합의

○ 김영삼 대통령의 방중과정에서 이미 논의되었던 상기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데 합의하였음.

- 이와 관련, 李鵬 總理는 국내 대기업 총수들과의 개별면담, 산업시찰과정에서 해당분야의 양국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Ⅲ. 李鵬 總理의 방한과정에서 표출된 중국의 對韓半島政策 基調

1. 韓半島의 平和·安定 維持

가. 남북한간의 勢力均衡 維持

- 중국은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한간의 세력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대남북한관계의 균형적 유지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본전제이기도 함.
- 특히 중국은 김일성 사후 북한 김정일체제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북한의 정치·경제적 불안과 이로 인한 남북한간의 均衡喪失, 한반도정세 악화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음.
 - 따라서 중국은 김정일체제 구축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에 대해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촉구하고 있음.

- 김영삼 대통령이 對北支援 의사를 표명하고 남북한간의 信賴構築, 共存共榮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李鵬 總理가 적극 동조하는 입장을 보인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음.

나. 對남북한관계의 균형적 유지

-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자신들이 대남북한관계를 균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중국의 이러한 인식은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대북한 편향,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대남한 편향을 통한 對南北韓 等距離 외교정책으로 표현되고 있음.
 - 중국의 이러한 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안정 유지와 관련, 중국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이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음.
- 또한 중국은 對남북한관계의 소극적인 현상유지보다는 필요할 경우, 對남한, 對북한관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면서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等距離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는 중국이 남북한관계, 동북아정세속에서 對남북한관계의 水位를 융통성있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것임.

다. 한반도문제의 當事者 解決 촉구

- 중국은 남북한 당사자간의 평화적인 대화·협상을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강조하여 왔으며, 李鵬 總理의 방한과정에서도 당사자 해결원칙이 재삼 강조되었음.
- 중국이 한반도문제의 해결과 관련, 남북한 당사자간의 대화·협상을 강조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북한의 일방적인 지지 요구를 回避하는 동시에, 대북한 압력·권고를 촉구하는 한국의 요구를 拒否할 수 있음.
 - 外勢의 介入을 最少化할 수 있음.
 - 특정 事案에 대한 자신들의 구체적인 입장이나 역할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을 회피할 名分을 確保할 수 있음.
-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李鵬 總理는 김영삼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라. 停戰體制의 平和體制 전환

- 李鵬 總理를 수행한 沈國放 중국외교부 부부장의 회견내용에서 나타나듯이 중국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즉 중국은 현단계의 동북아정세, 한반도 상황에 비추어 기존의 정전체제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전환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
 - 이러한 입장은 비록 북한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중국이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자국의 대표를 철수하기로 한 결정에서도 나타나고 있음.⁵⁾
- 그러나 중국이 군사정전위원회 철수를 결정하고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필요성 강조한다고 해서 중국이 이와 관련된 북한의 입장에 완전히 동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음.
- 중국은 평화체제전환 문제를 관련국가들의 개입여지가 없는 북·미간의 협상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
 - 또한 중국은 평화체제전환 문제에 대한 한국의 간여 여지와 적절한 역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미국의 對북한 영향력을 견제하고 同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참여의사를 개진하는 동시에, 한국에 대해서도 노력 여하에 따라 일정한 역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됨.⁶⁾

5) 중국의 군사정전위원회 철수와 관련, 북한의 중앙통신은 10월 27일 “군사정전위원회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이 곧 판문점에서 철수할 것이며, 同日 북한군 판문점 대표단을 ‘작별방문’했다”고 발표한 바 있음.

6) 다만 중국이 한국의 적절한 역할을 인정하는 내면에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문제가 북·미간의 논의사안이 아니고, 중국도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을 표명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2. 한국과의 經濟交流·協力 強化

- 李鵬 總理의 방한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한국과의 경제교류·협력 강화는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중국이 全方位 개혁·개방정책 추진과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과거 남부지역의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 전략을 확대조정하여 上海·烟臺·青島·天津·大連 등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제2의 경제도약을 추진하면서, 한·중 경제교류·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특히 중국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중국의 東部沿岸·渤海灣 지역에 대한 한국내 대기업의 직접투자 확대를 요청하고 있음.
 - 李鵬 總理는 방한일정의 대부분을 차지한 경제계 인사들과의 접견, 산업시찰과정에서 한국내 대기업의 투자진출을 적극 요청하였음.
- 한편, 중국은 한국과의 교역증대, 한국기업의 투자 확대 등과 함께 한국과의 기술합작문제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음.
 - 李鵬 總理의 방한중에 성사된 민간항공기 공동개발, 원자력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등은 중국의 이러한 정책방향이 반영된 것임.

3. 對동북아 影響力 擴大를 위한 기반 구축

- 중국은 한반도를 자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국제질서 수립이라는 全方位 外交目標 실현을 위한 일차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
 - 중국의 입장에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는 동북아지역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지위 증진이라는 보다 높은 차원의 외교목표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의 의미를 갖고 있음.

- 따라서 중국은 최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의 역학구조 변화, 특히 북·미간의 핵문제 타결 이후 미·일의 대북 관계개선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대한반도 영향력을 고수 내지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중국은 미·일의 대북 관계개선 이후 북한의 對中政策 변화 가능성과 이로 인한 對北 영향력 감소 가능성을 내심 우려하고 있으며, 만약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고 있음.

- 중국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대한반도 영향력의 확대·유지를 위해 강구하는 방안 가운데 한국과의 정치·외교적 공감대 확대를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음.
 - 즉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강화를 통해 향후 대북한관계에서 야

기될 수 있는 영향력 감소를 만회함으로써 대한반도 영향력의 기존 水位를 고수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음.

- 중국의 이러한 판단에는 북·미 관계개선 과정에서 한국 역시 대미관계에서의 손실부분을 對中關係 강화를 통해 보상받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인식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러한 상황판단과 정치적 의도를 배경으로 한·중 양국은 동북아 지역의 신국제질서 수립과정 및 기타 국제적 사안의 해결과정에서 정치·외교적 공감대를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동북아 국제질서 재편과정에서의 동반자관계 확립」으로 표현되었음.

IV. 한국의 政策的 考慮事項

1. 장기적인 關係發展 構圖 설정

- 李鵬 總理의 방한중에 논의된 바와 같이 한·중관계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동반자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對美, 對日 關係改善을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질서변화, 나아가 한반도 통일 이후까지를 고려한 장기적인 한·중 관계발전 구도를 설정하여야 함.

- 李鵬 總理 방한 이후 정부가 적극 모색하고 있는 새로운 외교 전략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도 명확한 입장·원칙에 입각한 對中政策의 장기적인 구도 설정이 요구됨.

- 이러한 관계발전 구도속에는 기존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한 양국 관계의 저변 확대는 물론, 軍事·安保協力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관계발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2. 분야별 均衡的 關係發展 강구

- 경제일변도의 한·중관계를 지양하고 정치·군사·안보를 포함한 균형적인 관계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중국이 정치·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북한에 傾倒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 대해 지나치게 경제적 實利爲主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경계하는 동시에 중국의 정책변화를 촉구함.
- 이를 위해 중국에 대해 분야별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한·중관계의 안정·지속적인 발전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남북한 관계개선,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주지시켜야 함.
 - 이와 함께 한국도 철저한 실리위주의 對中政策을 추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중국의 태도변화를 유도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

- 민간항공협정, 항공기공동개발에 관한 약정, 원자력협력협정 등 李鵬 總理의 방한중에 체결된 각종 협정이 초보적인 원칙만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실행과정에서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함.

3. 對北 대응차원의 對中政策 지양

- 중·북한관계, 한반도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對中政策에서 북한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대중정책 전반에서 對北 對應의 색채를 줄여가야 할 것임.
-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드러나듯이 중국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원칙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존의 태도를 고수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의 정책변화를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대북정책과 관련, 사안별로 중국의 협력을 강구하되, 쌍방의 입장이나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중국의 협력을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가 없음.
 -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쌍방의 관계발전이 위축되거나 불필요한 양보를 하게 될 것임.
 - 李鵬 總理는 離韓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對北 내정불간섭, 개혁·개방정책 강요 不可 입장을 재삼 강조하였음.

4. 軍事·安保協力 추진

- 한·중관계를 동북아지역의 진정한 평화정착을 촉진하는 동반자관계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양국간의 군사·안보협력 확대가 불가피함.
 - 한·중 군사·안보협력은 대북 대응차원에서 추진되기 보다는 최근 정부가 적극 모색하고 있는 동북아지역의 多者間 安保協力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함.

- 한·중 군사·안보협력의 저변 확대방안으로 中國軍部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중국군부가 중국의 對북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鄧小平 사후 중국의 권력변동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접촉·교류를 모색함.

5. 北·美, 北·日 修交過程에서의 韓·中協力

-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북·미간 협의가 타결된 이후 북·미, 북·일 관계발전이 가속화될 경우 중국은 적절한 역할을 모색하고자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한·중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됨.

- 특히 중국은 북·미 관계정상화를 위한 政治會談에서 북한의 개혁·개방 확대 등의 문제가 쟁점화될 경우 쌍방의 막후절충 역할을 수행하고자 할 것임.
- 北·美, 北·日 關係正常化 추진 과정에서 한국은 중국에 대해 북한의 인권개선 조치와 連繫한 이산가족의 자유왕래 추진, 남북 「기본합의서」 성실 이행, 북한의 개혁·개방 확대 등을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관련, 중국의 일부 지역(북한에 비교적 인접한 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북한 勞動力 使用, 북한지역에서의 한·중 합작기업 설립 운영, 중국내 한국기업(혹은 한·중 합작기업)이나 延邊 科學技術大에서 북한기업의 간부, 노동자의 技術教育 실시 등을 위한 중국의 협조를 요구함.
 - 한국이 吸收統一을 원치 않는다는 점과 남북한 共存共榮을 위한 대북지원 의사를 표명했고, 중국도 한국의 이러한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는 점에서 양국간 협력이 구체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 한편 한국은 북·미 관계개선의 경우와 같이 일본의 대북 관계정상화 지지 입장을 견지하되, 일본의 대북 관계개선은 북한의 개혁·개방 속도,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정착을 고려하여 속도와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임.

- 한국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는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고려, 적극 동조하는 입장을 보일 것임.

6. 중국의 對內外 政策變化에 대한 對備策 강구

- 중국의 대내적 당면과제는 鄧小平 後繼體制의 확립, 개혁·개방정책 추진과정에서 심화된 사회주의 체제·이념과 시장경제체제의 不協和音, 중앙과 지방의 대립, 계층간 갈등 해소이며, 대외적 과제는 대만문제 해결, 홍콩반환, 티베트 등 민족자치구의 독립움직임 억제 등임.
 - 鄧小平 사후 권력변동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대비책을 강구하고, 중국지도부의 권력구조, 人脈, 性向, 對북한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기초로 黨·政·軍지도부와의 공식·비공식 접촉을 적극 확대함.
 - 중국이 주력하는 시장경제체제 확립과 관련,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모색함(一例로 중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기업경영·관리 수준 제고와 관련, 한국정부 혹은 기업이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원).
 - 중앙정부와의 관계 강화 이외에 중국의 지방정부, 지방기업들과의 유대를 강화함.
 - 민간차원의 韓·臺灣關係를 강화하는 동시에 兩岸關係의 변화 양상, 대만의 대내외정책 변화, 美·日·佛·獨 등 주요 서방국의 對대만정책 변화 추이를 주시함.

- 홍콩반환과 관련된 中·英協商의 진척 상황, 외부세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 티베트의 독립 움직임 등에도 관심을 기울임.

7. 統一對備 韓·中協力

-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공식 입장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한민족의 염원을 존중하며 한민족 스스로의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것임.
 - 이는 중국이 원칙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되 통일방식은 반드시 「남북한간의 대화·협상」에 의한 「平和的」, 「自主的」 통일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한 것임.
 -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자국의 동북아정책, 한반도정책 목표 실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 외세개입에 의한 통일을 우려하고 있음.
- 한편 중국은 북한의 정치·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남한에 의한 북한의 吸收統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대내외적 지원을 지속하되, 이러한 노력이 성과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일차적으로 외세의 개입을 견제하고 「統一韓國」과의 새로운 관계발전을 도모하는 선에서 자국의 이해관계를 유지하고자 할 것임.
 - 즉 중국은 蘇·東歐의 붕괴과정에서 융통성있는 정책을 추진했

던 것처럼 일단 한반도의 상황변화가 기정사실화되면 신속한 政策轉換을 시도할 것임.

- 한반도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방향을 감안할 때, 통일과 관련된 한·중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자주·평화통일 의지 및 동북아지역 평화·발전 촉진요인으로서 통일한국의 位相을 지속적으로 인식시켜야 함.

◎發刊資料目錄 案內◎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 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的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Ⅳ)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Ⅲ)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備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備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的 役割: 北韓映畫分
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공동체」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6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의 權力基盤 研究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和 選舉制度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
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
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
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 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
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
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 會議을 계기로 본
亞·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北韓 核問題와 美·北 關係改
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외자유치 관련법 제
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 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9期 第7次會議 結果 分析
- 94-10 韓·日關係 定立方案：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脫北者 發生 背景 分析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1994. 6. 30)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1994. 9.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論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9)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한독 WORKSHOP: ECONOMIC PROBLEMS OF NA-
TIONAL UNIFICATION(1993)

〈資 科〉

-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 93-03 獨逸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統一情勢分析 94-17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4726, FAX : 232-5341

印刷處 웃고문화사 전화 : 267-3956

印刷日 1994년 11월 일

發行日 1994년 11월 일
